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 >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0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 ..... | 2  |
|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정제도의 벌칙 완화 .....    | 7  |
| IV . 입법의 재정영향 .....                 | 11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17.
3. 회 부 일 : 2026. 7.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보건·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도 사업자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벌 부담은 기업·국민의 경영심리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정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형벌 규정도 기존 인증제도에 비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 Ⅲ. 검토의견

####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구분             | 현행  | 개정  | 관련 규정                                                                                                                                                                      |
|----------------|-----|-----|----------------------------------------------------------------------------------------------------------------------------------------------------------------------------|
| 농촌융복합산업<br>사업자 | 인증제 | 지정제 | 제2조(정의)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인증의 표시),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제14조(인증의 취소),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39조(청문) |

※ 신 · 구 조문대비표(12p) 참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 판매, 문화체험 · 관광 ·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농업인 등<sup>1)</sup>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융자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sup>2)</sup>을 받을 수 있음.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 개요 ]

| 구분             | 세부내용                                                                                           |          |                                                                                     |
|----------------|------------------------------------------------------------------------------------------------|----------|-------------------------------------------------------------------------------------|
| 대상             |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등 | 인증<br>표시 |  |
| 인증<br>필요<br>요건 | ○주원료는 국산 농산물 사용<br>○지역 농산물 50% 이상 사용<br>○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8백만원’ 이상 등                   |          |                                                                                     |
| 인증사업자<br>혜택    | ○자금 융자지원,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홍보 지원 등                                                             |          |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2월 여러 부처가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동 계획에는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인증이므로 인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대상이 ‘농업인 등’으로 인증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정비방안에 포함하고 있음.

#### 2) 관련사업 예시

- (판로개척)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전(기업·기관 연계), 안테나숍 등 활용 판로개척 지원
-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 사업 분야 다각화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자금지원) 운영(3억원/변동), 시설(20억원/고정 2.0% 또는 변동) 자금 저리 융자
- (민간투자) 창업 초기(7년 미만) 사업자 대상 전문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보육·투자 유치 촉진, 민간투자 기반 사업화 자금 지원

## [ 인증제도 개선 방향 ]

| 개선방안                   | 주요 내용                                                                                                       |
|------------------------|-------------------------------------------------------------------------------------------------------------|
| ① 인증제도 정비<br>(기업부담 경감) | <b>❶</b>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br><b>❷</b> 유사·중복 인증 통합<br><b>❸</b>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br><b>❹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b> |
| ②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b>❺</b>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br><b>❻</b>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br><b>❼</b> 해외인증 인정 확대                           |
| ③ 관리시스템 개선             | <b>❽</b> 인증 신설 절차 강화<br><b>❾</b>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p.4

###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 ✓ (사례)수산식품 명인 (해수부)

- ▶(현황)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등의 우수한 자를 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
- ▶(개선)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 ✓ (사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고용부)

- ▶(현황)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
- ▶(개선) 서류심사를 통한 **지정제도로 전환**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27. p.8.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제도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법률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인증’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sup>3)</sup> 또는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sup>4)</sup>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지정’은 주로 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sup>5)</sup>

현행법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경우 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② 지원·육성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sup>6)</sup> 용례상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제 전환에 따라 하위 입법 및 지정기관·심사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일정 기간의 시행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도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3)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15.

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354

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p.349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말 기준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2,752개소가 인증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다른 법률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 간 용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
| <p>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u>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u>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u>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u>할 수 있다.</p> |

##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정제도의 벌칙 완화

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완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1조).

| 현행                                                                                              | 개정안                                                     |
|-------------------------------------------------------------------------------------------------|---------------------------------------------------------|
| 제41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삭 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r>-----<br>-----.                                |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2. ----- 지정-----<br>-----<br>-----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지정제도에 대한 제재규정을 살펴보면, 「외식산업 진흥법」의 우수외식사업자 지정제, 「식품산업진흥법」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제 등은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와 ② 상호 등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지 않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별칙(예시) ]

| 구분          | 우수<br>외식사업자<br>지정           | 대한민국식<br>품명인<br>지정                      | 공동농업<br>경영체<br>지정                | 사회적 농장<br>지정                                       | 해외 우수<br>한식당 지정             |
|-------------|-----------------------------|-----------------------------------------|----------------------------------|----------------------------------------------------|-----------------------------|
| 근거          | 「외식산업<br>진흥법」               | 「식품산업진<br>흥법」                           | 「농어업 경<br>영체 육성 및 지<br>원에 관한 법률」 | 「농촌 지역 공<br>동체 기반 경<br>제·사회 서비<br>스 활성화에<br>관한 법률」 | 「한식진흥법」                     |
| 거짓·부<br>정지정 | ○ 지 정 취 소<br>(의무)<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의무)<br>○ 500만원 이<br>하 과태료 | ○ 지 정 취 소<br>(의무)<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의무)<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의무)<br>○ 처벌없음 |
| 상호 등<br>대여  | ○ 지 정 취 소<br>없음<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재량)<br>○ 500만원 이<br>하 과태료 | ○ 지 정 취 소<br>없음<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없음<br>○ 처벌없음                          | ○ 지 정 취 소<br>없음<br>○ 처벌없음   |

그러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 받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유사 제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형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유사 제도와 실효성 확보수단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벌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농림축산식품부 내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에 비해 무거운 상황인데,

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는 지원·육성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sup>7)</sup>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일반숙박시설 등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8)</sup>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자격 부여 제도를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거짓이나

7)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up>9)</sup>을 부과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벌칙의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벌칙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에 대해 추후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u>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u> 에 한정한다) |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u>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u> 에 한정한다)                                                                       |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u>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u>                                                                                  |                                                                                                                           |
|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u>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u> 를 말한다                             |

9)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진단 또는 제86조제1항 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sup>10)</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7 |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u>인증</u> 을 받은 자를 말한다.                                                                                       | 4. -----<br>-----<br>----- <u>지정</u> -----<br>--.                                        |
| 4의2.·5. (생략)                                                                                                                                          | 4의2.·5. (현행과 같음)                                                                         |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u>인증</u>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정) ① -----<br>-----<br>----- <u>지정</u> -----.                          |
| ② 제1항에 따라 <u>인증</u>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u>지정</u> -----<br>-----<br>-----<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u>인증 여부</u> 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서</u> 를                             | ④ -----<br>-----<br>-----<br>----- <u>지정 여부</u> -----<br>-----<br>----- <u>지정서</u> ----- |

| 현행                                                                                                                                                                                                                                                                                                                                                                                                                                                                                                                                                                             | 개정안                                                                                                                                                                                                                                                                                                                                                                                                                                                                         |
|--------------------------------------------------------------------------------------------------------------------------------------------------------------------------------------------------------------------------------------------------------------------------------------------------------------------------------------------------------------------------------------------------------------------------------------------------------------------------------------------------------------------------------------------------------------------------------|-----------------------------------------------------------------------------------------------------------------------------------------------------------------------------------------------------------------------------------------------------------------------------------------------------------------------------------------------------------------------------------------------------------------------------------------------------------------------------|
| <p>발급하여야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u>인증</u>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19.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0조(<u>인증의 표시</u>)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u>인증을</u>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u>인증의</u>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u>인증을</u>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u>인증서</u>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 <p>-----.</p>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br/>----- <u>지정</u> -----<br/>-----<br/>-----<br/>-----<br/>-----<br/>-----<br/>-----<br/>-----<br/>-----<br/>-----<br/>-----.</p> <p>1. ~ 1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u>지정의 표시</u>) ① -----<br/>----- <u>지정을</u> -----<br/>-----<br/>-----<br/>-----<br/>----- <u>지정의</u> -----<br/>-----.</p> <p>② ----- <u>지정</u><br/><u>을</u> -----<br/>-----<br/>-----<br/>-----<br/><u>지정서</u>-----<br/>-----.</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u>인증</u>을 받지 아니한 자는 <u>인증</u>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u>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u>)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u>인증의 유효기간</u>은 <u>인증을</u>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② <u>인증을</u>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u>인증효과</u>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u>인증을 갱신</u>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u>인증을</u>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u>인증</u>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u>결격사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u>인증이 취소</u>(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u>인증이 취소된</u> 경우는 제외한다)</p> | <p>③ ----- <u>지정</u>을 ----- <u>지정에</u> -----<br/>-----.</p> <p>제11조(<u>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u>) ① ----- <u>지정의 유효기간</u>은 <u>지정</u>-----<br/>--.</p> <p>② <u>지정을</u> 받-----<br/>-----<br/>----- <u>지정 효과</u><br/>-----<br/>----- <u>지정을 갱신</u>-----<br/>-----.<br/>-----<br/>--- <u>지정</u>-----<br/>---.</p> <p>③ <u>지정</u>-----<br/>-----<br/>-----.</p> <p>제12조(<u>결격사유</u>) -----<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 <u>지정이 취소</u>-----<br/>----- <u>지정</u><br/><u>이 취소된</u> -----</p> |



| 현행                                                                                                                                                                                                                                                                                                                                                                                                                                                                                                                       | 개정안                                                                                                                                                                                                                                                                                                                                                                                                                                                                                               |
|--------------------------------------------------------------------------------------------------------------------------------------------------------------------------------------------------------------------------------------------------------------------------------------------------------------------------------------------------------------------------------------------------------------------------------------------------------------------------------------------------------------------------|---------------------------------------------------------------------------------------------------------------------------------------------------------------------------------------------------------------------------------------------------------------------------------------------------------------------------------------------------------------------------------------------------------------------------------------------------------------------------------------------------|
| <p>당하는 경우에는 <u>인증</u>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u>을 받은 경우</p> <p>2. ~ 4. (생략)</p> <p><u>&lt;신설&gt;</u></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인증</u>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생략)</p> <p>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u>인증</u>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p> <p>5.·6. (생략)</p> <p>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 <p>----- <u>지정</u>-----<br/>-----.</p> <p>1. -----<br/>-- <u>지정</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자</p> <p>② -----<br/>----- <u>지정</u>-----<br/>-----<br/>-----<br/>-----.</p> <p>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u>지정</u>-----<br/>-----<br/>-----</p> <p>5.·6. (현행과 같음)</p> <p>제39조(청문) -----<br/>-----<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p>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br/>사업자의 <u>인증</u> 취소</p> <p>2. ~ 5. (생략)</p> | <p>1. -----<br/>----- <u>지정</u> -----</p> <p>2. ~ 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